

■ 지방선거 핫코너

민주 영암·보성 단체장 후보들 단일화 나서나

민주당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후보경선 방식 결정을 앞두고 후보 간 연대와 단일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들은 경선방식 변경을 요구하거나 현직 단체장에 대한 공동 전선을 펴기 위해 연대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지방선거에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원배·김재원·전동평 민주당 영암군수 예비후보 3명은 15일 전남도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방식을 시민배심원제로 요구하는 연대를 선언했다.

이들은 “국민참여경선은 정치 신인들의 참여 기회를 원천봉쇄하는 것”이라며 “시민배심원제에 의해 당내 기득권을 배제하고 정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민배심원제에 따른 경선에서 3명 중

1명이 후보로 확정되면 해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보성군도 정중해 현직 군수에 맞서 나머지 후보들의 단일화 움직임을 알고 있다. 박철현 전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현역 단체장을 제외한 후보 간의 단일화를 촉구했다. 그는 “이미 후보 간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순천시와 여수시장 출마 후보들도 현 노관구 순천시장과 오현석 여수시장에 대한 후보단일화 추진 움직임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후보들 모두 자기로의 단일화를 바라고 있어 실제 후보 단일화까지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광태 “공직자들 선거 중립 지켜라”

박광태 광주시장은 15일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이 선거에 입장 중립을 지킬 것을 강력히 지시했다.



박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공무원들은 선거에 일절 관여하지 말고 본연의 행정수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해 줄서기를 하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박시장은 또 “이럴 때일수록 공직자격을 더욱 확고히 해야 한다”며 “지난 11일 부임한 송규근 행정부시장을 중심으로 내실있는 시정을 펼쳐,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정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용섭 “광주 구도심 활성화 주력해야”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15일 “광주 발전을 위해서는 신시가지 개발도 중요하지만 쇠퇴하는 구도심 활성화와 노후한 주거환경 개선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그동안 도심재개발이나 주택재개발은 고층빌딩을 건설하거나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관에 박힌 재개발을 피하고 광주 구도심에 문화 예술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기존의 문화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영상, 애니메이션, 콘텐츠 관련 기업 등을 재개발 지역에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갑길 “감세정책 소득 상위만 혜택”

전갑길 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2인 이상 가구의 세 부담을 보면 소득이 상위 20%인 가구만 감소하고 나머지 80%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현 정부가 ‘감부자 정권’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전 예비후보는 “정부는 감세정책으로 전 계층의 세금 부담이 골고루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거짓말로 드러났다”면서 “감세로 서민들의 고통은 더 심해지고 현 정권은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면서 아이들의 기본권인 무상교육에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형일 “주민자치센터를 복지센터로”

양형일 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15일 “서비스 행정 차원에 머물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거점별 주민 맞춤형 복지서비스 센터로 그 기능을 확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주민자치센터는 주민과 근접해 있다는 점에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실현에 적합한 거점별 인프라”라며 “이러한 특성을 잘 살리면 훌륭한 주민맞춤형 복지서비스 센터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각 주민 센터에 ‘복지 전담 공무원’을 파견해 복지혜택 상담 등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석형 “동부권 3개시 생활권 통합을”

이석형 민주당 전남도지사 예비후보는 15일 “전남 동부권 3개 시의 생활권 통합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여수, 순천, 광양에 거주하는 4천325명을 대상으로 3개 지역 행정구역 통합문제에 대한 정책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3.2%가 찬성한 반면 반대 35%, 모름 11.8%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지역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행정구역 통합 대신 교통망, 도시계획 공동수립 등 생활권 통합을 통한 공동커뮤니티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훈 “전남 모든 지역에 후보자 내야”

정훈 한나라당 전남도지사 예비후보는 15일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호남의 외연을 확대하려면 호남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6·2지방선거에서 호남 전 지역에 후보자를 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만일 전남지역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출마시키지 못할 땐 도당책임자에게 페널티를 적용해야 한다”면서 “자신의 지역구마저도 후보를 내지 못하는 도당위원장은 허수아비에 불과한 지도부로 인식할 수밖에 없으며, 전남도당은 반드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원섭·강기수 “특별교부금 투명 집행할”

민주노동당 장원섭(사진) 광주시장 예비후보와 강기수 서구청장 예비후보는 15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의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이 일당 독점 구조에서 업무추진비보다 더한 썩지돈이 돼 버렸다”며 “특별교부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별교부금으로 구청장과 시의원, 구의원을 관리하는 등 쏠세우기, 일당 독점구조를 강화하는데 사용되고 있다”면서 “시가 구청에 지원한 특별교부금 사용 내역을 자세히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형석 “광주·송정지역 통합은 일회성”

이형석 민주당 북구청장 예비후보는 15일 송병대 국민참여당 광산구청장 예비후보가 전남 광주지역을 송정지역으로 통합하자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지역 이기주의에 편승한 일회성 선거전략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이 후보는 “광주지역은 동구·남구 지역민에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있어 여객 중심의 문화·관광 비즈니스타운으로 발전시키고, 송정지역은 산업과 화물중심의 교통거점으로 각각의 성장모델을 만들어 가야 한다”면서 “뜬금없는 이진통합 논리로 유권자의 환심을 사려는 구 시대적 정치행태에서 벗어나라”고 촉구했다.

이호준 “남구 구도심 주거개선 주력”

이호준 민주당 남구청장 예비후보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남구 일부 지역의 도심 공동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구도심 주거환경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양림동·방림동·사직동·월산동 등 단독주택 지역의 주택 노후화와 주거환경 열악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이들 지역을 쾌적하고 특색 있는 도심 주거환경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청장이 되면 도로·주차시설·도시가스·소방 및 재해안전·공공도서관·소공원 등 쾌적한 주거환경 기반시설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호 “친 강운태계 후보 단일화” 촉구

최영호 민주당 남구청장 예비후보는 15일 “친 강운태 계 남구청장 후보 단일화가 난항을 겪고 있다”면서 “여론조사 방식을 통해 단일화를 조속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지난 5일 단일화 원칙에 합의했고, 이날까지 후보 단일화를 이루기까지 지역민에게 약속한 상태에서 단일 후보를 확정하기 못하는데 대해 깊은 책임을 느낀다”면서 후보 간 유·불리를 떠나 조속한 단일화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최영호 기자 cki@kwangju.co.kr /홍영기 기자 redplane@kwangju.co.kr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 공천 ‘쉽지 않네’

기초단체장, 野는 지원자 없고 與는 내부 반발

광주·전남 광역·기초 후보 27명 그쳐

여야가 6·2 지방선거에서 여성 기초단체장 등 여성후보를 다수 배출한다는 목표 아래 적극적인 공천 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지원자가 없거나 내부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원자 자체가 많지 않아 고민이고, 한나라당은 내부 반발이 예상으로 거세 고민이다.

민주당은 여성 후보자에게 공천 심사에서 20%의 가산점을 주고 있지만, 여성 후보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15일 현재 광주·전남에서는 기초단체장의 경우 광주 서구와 전남 남강진군 2곳에서 김선옥 전 시의원과 국립에 전남도의원 등 단 2명의 여성 후보가 단체장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을 뿐이다. 광주 시의원은 김성숙·이명자·양혜령 현 시의원 3명만이 ‘재선’을 위해 뛰고 있고, 전남도의원도 전금숙 목포시의원 등 2명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수도권에서도 3명 정도 범위에

서 여성 기초단체장 전락공천도 검토하고 있지만 여성 후보자가 극소수에 불과해 공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나마 서울 종로구와 강북구, 은평구, 마포구 4곳에서 5명의 여성 후보가 단체장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지만 경기도 등 대도시 지역에서는 나서는 사람이 없는 형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도 여성 정치인력 발굴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자질과 능력, 의지를 갖춘 인재를 찾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역시 광주·전남에서 여성 기초단체장 입지자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도권의 경우 일부 지역의 여성 기초단체장 전락공천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 국회의원들이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한편, 광주·전남지역 광역·기초의원 여성 예비후보 또한 이날 현재 27명에 불과해 지난 2006년 41명에 비해 34% 가량 줄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정치 철새’ 대이동?

지방선거 앞두고 줄줄이 당적 변경

여야가 6·2 지방선거 후보자 영입 및 공천 작업을 본격화하면서 당적을 변경해 출마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여야 모두 잦은 당적이탈 및 변경, 상습적 공천불복자에 대해선 공천심사에서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이번에도 어김없이 당을 바꿔 탄 인사들을 지방선거 후보자로 영입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이 15일 발표한 1차 영입인사 명단에는 최홍건 전 대통령직속 중소기업 특위 위원장(장관급)과 임좌순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차관급)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최 전 위원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 산업자

원부 차관과 새천년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노무현 대통령후보 특보를 거쳐 참여정부 시절 열린우리당 특위위원장, 지구당 위원장 등을 지냈다.

또 임 전 총장은 2005년 4월 당시 열린우리당 후보로 아산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해 낙선했다가 이번에 한나라당에 입당, 아산시장이후 출마를 선언했다.

야당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최근 한나라당을 탈당한 정동일 서울 중구청장을 영입했다. 정 청장은 2004년 열린우리당 후보로 중구청장 재보선에 출마했다 낙선한 뒤 2006년 지방선거 직전 한나라당으로 옮겨 구청장에 당선된 전력이 있다.

민주당에 입당한 우근민 전 제주지사는 민자당, 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으로 당적을 변경한 바 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Kukrakjeon Namgol-dang'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traditional Korean building and text about a community event.

Advertisement for 'Sangsu-dong' (山水洞)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traditional Korean building and text about a community event.

Advertisement for 'Sangsu-dong' (山水洞)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traditional Korean building and text about a community event.

Advertisement for 'Sangsu-dong' (山水洞)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traditional Korean building and text about a community event.